내 용 증 명

키인수학전문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30, 4, 5층 / TEL : (02)912-0503

문서번호 : 키인 2026-04-24-01

이 우편물은 2026-04-24
제 311191200042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정릉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수신인 : 변 향 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94, 401동 1007호

발신인 : 키인수학전문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30, 4,5층

제목 :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엄중 경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변향희)는 키인 수학학원에서 원장(관리자)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계약서상 퇴사 전 인수인계의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학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신인은 회사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도의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발신인에게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냅니다.

조병훈 강사와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상황(두명의 보충학생을 한 교실에서 변향희, 조병훈 함께 보충함), 총 세명의 강사 중 조병훈 강사만 회의한다는 명목으로 늘 문닫고 교실에서 있었던 점, 다른 강사가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병훈 강사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점 (이로 인해 모든 학생과 몇몇의 학부모, 관리자들이 두 사람 무슨 사이냐고 의심하게 된 상황으로 학원 이미지 실추가 되었고, 수신인 본인도 아이들이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묻는다고 이야기 하고 다님) 초래, 새로운 강사가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데스크 앞에서 3번이나 묻는데 강사에게 면박을 주고 결국 강사가 화를 내고 교실로 들어가니 관리자에게 고생 좀 해봐야 한다면서 가르쳐 주지 않은 점, 원장을 믿고 학생이 버릇없다고 하는 관리자의 속얘기를 학생에게 그대로 가서 전달하여 학생과 관리자에게 상처를 준 점. 강사의 월급을 비밀 유지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에게 모두 이야기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점, 강사들 앞에서 관리자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려보며 따르지 않은 점, 원장으로서 분기 설명회를 해야함에도 거절하고 하지 않은 점, 특강 해야 한다고 제안해놓고 특강비 100% 지급하지 않으면 특강을 안 하겠다고 협박한 점, 본인의 오빠가 작고한 이후 공황장애가 와서 힘든 일은 못한다며 강사들 앞에서 늘 힘들다는 시그널을 주어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 시킨 점, 공황장애 약 복용 중에 다이어트 한다며 마운자로를 맞기에 공황장애약과 같이 먹으면 안된다는 키인 관리자의 조언에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수업에 차질을 준 점,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더 예민하게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임했던 점, 무엇보다 회의 시간에 강사들 앞에서 큰소리로 관리자를 무시하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으며, 강사와 관리자를 이간질 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학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장과 같은 결로 관리자를 무시하게 만든 점 등 피눈물나는 고통을 관리자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그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4. 특히, 이 과정에서 귀하가 발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포함된 "증 제1호증"은 현재 재원중인 학생들의 성명 및 연락처 자료는 귀하가 퇴사한 이후의 최신 자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귀하가 퇴사 후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인 학원의 관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의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를 반출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입사와 퇴사 시 작성하는 계약서와 사직서에 이미 회사의 기밀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데 합의하였고, 설사 합의가 없었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이는 명백한 위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발신인은 귀하의 불법적인 자료유출 과정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증명 받은 후 3일안에 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장을 즉시 접수할 것임을 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